

보도시점 2026.6.17.(수) 16:00 배포 2026.6.17.(수) 10: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완료(4.1) 및 역대 최대 규모(13,240건)의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 진행 중
-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을 정리, 2~5월 간 5,205억원 국고 수납
- 6~9월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본격 추진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차관 주재로 6월 17일(수) 2026년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 보고안건 :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②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정리 추진 실적(5월)
③ 차세대 e나라도움 BPR/ISP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간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3.10)의 후속조치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4.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5.20) 등 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우선,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4월 1일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동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차관)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도 완료(5.20)하였다.

이 밖에도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관리 제도 보강을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년 4월 중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현장점검이 종료되면, 기획예산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 및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 제재 등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정수급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현장조사 및 후속조치를 내실화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법 개정도 금년 하반기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5배 이내 → 8배 이내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현행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 * ① 반환명령 금액의 30% (예산 범위 내 지급) → 반환명령금액·제재부가금·가산금 등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
- ② 소액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급 → 500만원 정액 지급

[②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로 세외수입 5,205억원 국고수납]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24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리해 왔으며, '26년의 경우 총 2.7조원 규모(12.6만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에 대한 정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정리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8,270억원 (30.9%)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이 정리되었다. 이 중 국고로 현금 수납된 보조금은 5,205억원* 수준으로, 이는 '26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세외 수입 외에 추가로 국고 수납된 금액이다.

* '25년의 경우, 4~5월 간(2개월) 2,050억원 국고수납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처별 자체 점검, 교육 강화, 실효적 제재 강구 외에 모든 국고보조금 관리를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는 등 국고보조금이 제때 제대로 정산·징수되어 국고로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미정산·미징수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본격 착수]

기획예산처는 '17년 개통 이후 9년이 경과한 e나라도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수행에 착수하였다.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은 시스템 노후화 해소와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 대응, 그리고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9월 말까지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27년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일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 등 사후관리까지의 쉼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임 차관은,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책임자	단 장	강대현 (044-214-3370)
		담당자	서기관	정윤홍 (yoonhong@korea.kr)
			사무관	박미경 (gabkyung@korea.kr)

